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과제*

승 정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연구교수)

1. 서론

경제의 기본원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한정된 자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선택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뭇 달라진다. 공공부문은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즉,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영역,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영역 또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성이 강한 경우는 시장기능에 맡기기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공급을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서 경제적 파이를 크게 하는 효율성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악화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성 또는 공익을 우선시 하다 보면 공공부문이 비대해져 민간부문의 활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부문의 가용자원은 그 만큼 제약되어 위축이 된다(Crowding out). 이러한 구축효과를 실제로 측정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100만큼 늘어나면 민간부문의 공급은 5~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¹⁾ 이를 교육 분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공교육비지출 비율이 약 7.5%로 OECD국가 중 두 번째이지만 공교육 만족도는 최하위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비대는 민간부문에서 개인의 선택 폭을 위축시켜 질이 낮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²⁾

* 본 원고는 한국경제학회·한국조세연구원·한국행정학회·한국공기업학회 주최로 개최된 공공기관정책 공동 학술대회(2012. 7. 6(금),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Gruber(2011).

2)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

따라서 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보다 많은 자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비대에 따른 민간부문의 위축으로 경제의 효율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민영화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의 경쟁원리를 통해 효율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시장을 통한 효율성 추구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의 감소는 정부의 감독과 규제 장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 동안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비대화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글은 이러한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앞으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제2장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민영화 정책의 배경과 성과를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해외 민영화 동향을 살펴본 후 제4장에서 민영화의 필요성을 공공기관 규모의 비대화, 운용의 비효율성, 보조금 문제, 경영평가제도의 비효율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민영화정책의 과제와 더불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민영화 배경과 성과

1)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하고자 하였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와 공공부문의 확장을 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정부통제 하에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유치산업의 육성 및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해 탄생한 공기업³⁾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만 갔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는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민간부문의 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었다. 민영화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정부의 규제수단을 통해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민영화는 많은 나라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적 관여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또한 민간기업의 사업조건이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맡기고 공적 관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경영을 민간 기업의 노하우와 자금 등을 활용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급으로 시장에 적정 공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개입은 오히려 민간 부문을 몰아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3)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민영화의 방식에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의 방식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 기능만 민간에게 넘기거나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특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1980년대 이후 공기업의 운영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민영화의 흐름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공기업부문의 경쟁력 상실과 비효율을 타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당시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라는 당면과제가 민영화 검토의 배경이 되긴 했지만 민영화의 근본취지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였다. 최근에는 민영화 추진이 집권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는 추세이다.⁵⁾

2) 민영화 성과⁶⁾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후반부터 1973년 초반까지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인천제철 등 11개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를 시행하였다. 추진 목적은 부실기업정리와 민간기업의 육성에 있었고 민영화 방식은 주식매각과 현물출자 방식이었다. 민영화 정책 이후 3곳⁷⁾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흑자로 전환되어 민영화 정책이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0년대에는 2개 공기업, 4개 시중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이 당시 민영화된 기업도 경영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부분적이고 간헐적이었던 민영화 정책은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주요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달성했다. 이 당시 김대중 정부는 해외자본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빚을 떠안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틈을 타 골드만삭스 등 국제금융자본들이 한 건씩 올리고 튀는 ‘떡튀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총 23.4조원(재정수입 13.9조원, 기타수입 10.5조원)의 공기업 및 자회사 매각수입이 발생하여 정부수입의 확대효과⁸⁾와 경영효율성의 증진, 부실공기업의 적자 감축효과가 있었으며 산업 내 정부역할의 축소는 공공부문의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고 민간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식 대신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

5) 기획재정부는 2011년 지난 3년간 추진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인지도, 정책추진 성과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보수체계 개편, 노사관계 선진화, 통제할 등 공공기관 선진화의 세부 정책과제별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 ‘보수체계 개편’은 70.7%, ‘성과관리시스템 강화’는 68.1%, ‘노사관계 선진화’는 66.2%, ‘기관 통제합 및 기능조정’은 58.0%, ‘인력조정’은 55.3%수준으로 각각 잘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는 41.3%수준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낮았다.

6) 박정수(2011년), 기획재정부 자료를 이용.

7) 해운공사, 조선공사, 대한염업주식회사.

8) 박정수(2011), 김현숙(2007).

을 추구하면서 민영화는 중단되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경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민영화의 공공 독점을 ‘민간 독점’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다만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경영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면서 산업자원부에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과학기술부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건설교통부에 코레일네트웍스 등 3개, 문화관광부에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3개, 해양수산부에 부산항만공사 등 3개,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청에 각각 2개, 농림부·산림청·교육인적자원부에 각각 1개씩 총 28개의 공공기관을 신설하였다. 참여정부는 당연히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경영권 또는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키로 한 곳은 38곳으로 이중 12곳이 매각되었다(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 민영화 대상 14개 포함 시). 농지개량(2008), 안산도시개발(2009), 한국자산신탁(2010)의 매각을 완료했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이 완료된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 등 3곳이다.

최근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주)⁹⁾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¹⁰⁾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되므로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게 된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¹¹⁾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비용부담의 증가로 공공재로서 역할 미약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인천공항 등 공항 민영화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청주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선건설(주), 흥국생명보험(주),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ADC&HAS가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 원(부가세별도)에 인수한다.

10) 2012. 1. 31. 기재부 보도자료.

11) 최근 5개년 경영손익 (단위: 억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추정)	연평균
수 익	62	65	55	71	77	66
비 용	105	119	114	122	131	118
손 익	△43	△54	△59	△51	△54	△52

〈표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구 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 기관 - 완전 민영화 : 19개 - 일부지분매각 : 5개 *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 제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 〉 ○ 2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발) ○ 1개 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산신탁) ○ 3개 기관 공고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 상장 〉 ○ 3개 기관 완료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 '10년 이후 추진예정 : 15개 〉 ○ 여타 기관(8개) → 매각공고 등 절차 추진 ○ 산은·기은 및 자회사 (7개) → 시장상황에 따른 매각계획 준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16개)기관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14)개 기관 통합 완료 ○ 4(→2)개* 기관 미완료 *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기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완료
경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기관 경쟁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중
기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기관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 11개 기관 추진 중 ('10~'12)
정원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개 기관 2.2만 명 감축(△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완료
출자회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개 출자회사 매각·청산 등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지분매각) 41개, (청산·폐지) 5개, (통폐합) 2개 ○ 83개 회사 정리 추진 중
대졸초임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2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완료

3. 해외 민영화 동향

서구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 실패가 지적되고 시장기능의 중요성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고, 그 결과 민영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민영화의 주된 이유는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때문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국가 내의 문제로 인식되었기에 국제적 수준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 민영화 통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규모나 산업별 민영화 추진현황 등의 데이터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표 2> 전 세계 공기업 민영화수입 규모(1990~1998)

(단위: 100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호주	19	1,042	1,893	2,057	1,841	8,089	9,052	16,815	7,146
오스트리아	32	48	49	142	700	1,035	1,251	2,020	2,935
벨기에	-	-	-	956	549	2,681	1,222	1,562	1,467
캐나다	1,504	808	1,249	755	490	3,998	1,770	-	11
체코	-	-	-	-	1,077	1,205	994	442	469
덴마크	644	-	-	122	229	10	366	45	4,502
핀란드	-	-	-	229	1,166	363	911	835	1,999
프랑스	-	-	-	12,160	5,479	4,136	5,099	8,189	13,467
독일	-	325	-	435	240	-	13,228	1,125	364
그리스	-	-	-	35	73	44	558	1,395	3,892
헝가리	38	470	720	1,842	1,017	3,813	1,157	1,966	353
아이슬란드	-	-	21	10	2	6	-	4	129
아일랜드	-	515	70	274	-	157	293	-	-
이탈리아	-	-	-	1,943	6,493	7,434	6,265	27,719	13,619
일본	-	-	-	15,919	13,773	-	6,379	4009	6,641
한국	-	-	-	817	2,435	480	1,866	539	600
멕시코	3,122	10,757	6,859	2,503	766	167	73	2,690	995
네덜란드	716	179	-	780	3,766	3,993	1,239	831	335
뉴질랜드	3,895	17	967	630	29	264	1,839	-	441
노르웨이	73	-	-	-	118	521	660	35	28
포르투갈	1,192	1,198	2,326	500	1,132	2,425	3,011	4,968	4,271
폴란드	23	-	238	245	385	714	749	2,179	2,020
스페인	172	-	820	3,223	1,458	2,941	2,679	12,522	11,618
스웨덴	-	-	378	252	2,313	852	785	1,055	172
스위스	-	-	-	-	-	-	-	-	4,426
터키	486	-	423	546	412	515	292	466	1,009
영국	12,906	-	604	8,523	1,341	6,691	7,610	4,544	-
미국	-	-	-	-	-	-	-	-	3,100
O E C D 전 체	24,822 (83.0)	37,450 (78.2)	16,617 (45.6)	54,895 (69.6)	47,284 (72.3)	52,537 (71.3)	69,347 (71.3)	95,955 (62.4)	86,007 (75.1)
E U 15 개 국	15,662 [63.1]	24,090 [64.3]	4,247 [25.6]	29,573 [53.9]	24,940 [52.8]	32,765 [62.4]	44,518 [64.2]	66,812 [69.6]	58,641 [68.2]
전 세계	29,900	47,863	36,462	78,871	65,395	73,652	97,258	15,3782	11,4542

주: ()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는 OECD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 "Privatization: Recent Trends," Financial Market Trends, No.72. 1999.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전 세계 국가들의 민영화 수입 규모는 대략 7,000억 달러 정도로 그 중 OECD 국가들이 대략 70%에 달하는 4,850억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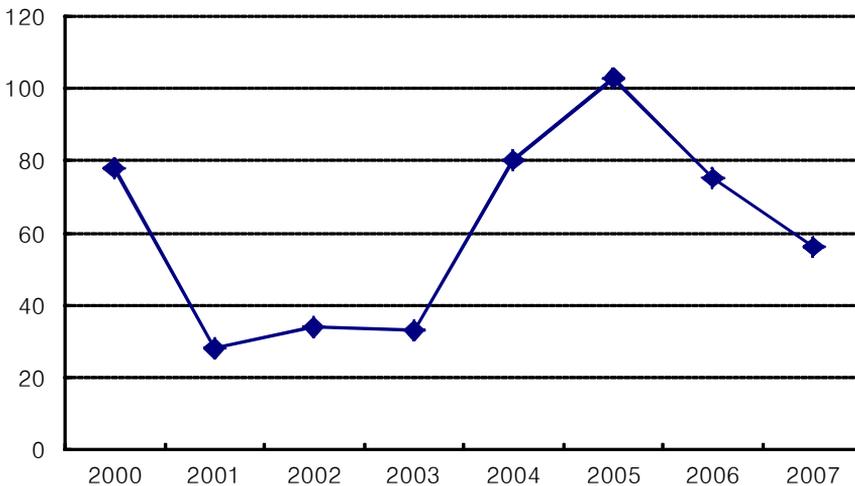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민영화가 추진된 지역은 유럽 국가들로 동기간 동안 유럽 15개국의 민영화 수입 규모는 3,000억 달러로 전 세계 민영화 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전 세계 민영화규모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1998년 아시아와 러시아 금융위기에 의한 시장여건의 악화와 국경 간 투자활동 위축,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 상실 등이 뒤따르면서 OECD 비회원국들의 민영화 추진이 크게 부진함에 따라 1997년 대비 26% 감소한 1,145억 달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1997년의 전 세계 민영화규모는 1990년 대비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OECD 국가들에서 민영화가 발생한 산업은 주로 제조업에 속하는 공기업들이 민영화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통신, 유틸리티(utilities)산업, 금융부문 등으로 점진적으로 민영화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8년 동안 OECD 국가들은 대략 4,870억 달러의 민영화 수입을 거두었다. <그림 1>은 2000년대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수익(2000~2007)

(단위: 10억 달러)



자료: OECD, "Priv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 Recent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2009로부터 재구성하였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의 민영화 수입 4,870억 달러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동안의 민영화 수입인 4,850억 달러보다 조금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90년대와 2000년대의 민영화 실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민영화 수입의 증가는 민영화 거래의 수, 혹은 민영화하는 기업의 규모 외에도 민영화하려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 것에도 일부 기인하기 때문이

다.¹²⁾

이 시기 OECD 국가들의 민영화 수입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역시 유럽의 국가들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총 2,330억 달러의 민영화 수입을 올렸는데, 그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와 이태리, 그리고 독일이었다. <표 3>은 이 시기 민영화 수입의 총액과 GDP 대비 규모에 있어서 높은 실적을 보인 국가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 3> 민영화 실적 상위 10개국(2000~2007)

민영화 수입 총액		GDP 대비 민영화 수입 비율	
국 가	총액(10억 달러)	국 가	2006년 GDP 대비 실적(%)
프 랑 스	98.2	슬로바키아	13.5
이 태 리	69.6	체 코	9.2
독 일	65.0	핀 란 드	8.7
일 본	33.2	아이슬란드	8.6
터 키	25.0	헝 가 리	6.9
네덜란드	23.1	그 리 스	4.8
오스트리아	20.0	터 키	4.7
영 국	18.4	포르투갈	4.4
핀 란 드	18.3	프 랑 스	4.4
스 웨 덴	16.0	폴 란 드	4.3
OECD 전체	497.7	OECD 전체	1.4

자료: OECD, "Priv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 Recent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2009.

최근의 민영화가 어떤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는지 역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민영화의 31% 이상이 통신(telecom)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19%가 수송(transportation)과 물류(logistics) 부문,¹³⁾ 17%가 유틸리티 부문,¹⁴⁾ 10%가 제조업 부문, 그리고 17% 정도는 금융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4. 민영화의 필요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부문의 비대는 민간부문의 영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공공부문의 확대에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것

12) 이러한 상관관계는 90년대 말부터 2002년까지 민영화 실적이 줄어들고, 2004년과 2005년 민영화 실적이 늘어난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의 주식시장 붐이 민영화 실적의 감소와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Priv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Recent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OECD, 2009.

13) 철도와 항공업, 공항의 민영화가 그 대부분을 설명한다.

14) 에너지 산업이 대부분을 설명한다.

이 아닐 것이다. 민영화의 필요성은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발생한 운용의 비효율성,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효율성과 기관장 선임 문제 등을 통해 찾고자 한다.

1) 규모의 비대화

공공기관 예산의 GDP 대비 규모, 공공기관의 인력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비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206조 2천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0년 464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GDP대비 비중을 보면 43.7%로 증가추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2002년 19만 1천명에서 2010년 24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중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이 2002년 0.84%에서 2010년 1%로 0.16%p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표 4> 공공기관 예산, 인원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02	2004	2006	2010
예산규모	206.2	246.6	291.2	464.3
GDP대비(%)	30.1	31.6	34.3	43.7
인원	191	204	250	248
경제활동인구대비	0.84%	0.87%	1.04%	1%

주: 알리오(www.alio.go.kr)와 김준기(2009)에서 재인용.

공공기관 인력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1%를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대기업 중 상시종업원수 상위 5개¹⁶⁾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610조 9천억 원이며 이중 공기업의 자산은 공공기관 총자산의 57.4%인 350조 9천억 원이다.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개 대기업의 자산총액(313조 5천억 원)보다 1.9배 정도 크다. 2009년 말 공공기관의 매출액은 239조 7천억 원이며 공기업의 매출은 삼성전자의 매출액 89조 8천억 원보다 적은 83조 4천억 원이다. 준정부기관은 63조 4천억 원, 기타공공기관은 92조 9천억 원 수준이다. 공공기관 매출액을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6개¹⁷⁾ 대기업의 매출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공기업 외형도 증가하였다는 점은 국회예산정책처(2010) 보고서에서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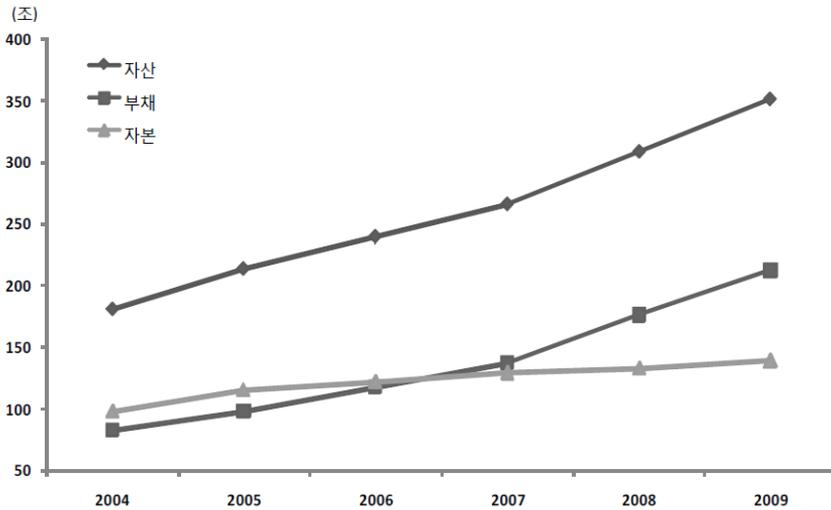
15) 알리오(www.alio.go.kr).

16) 2009년 기준 상시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8.5만 명), 현대자동차(5.6만 명), 기아자동차(3.3만 명), KT(3.1만 명, LG전자(3.0만 명) 순이다.

17) 삼성전자, SK에너지,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순이다.

타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공기업 규모가 이전 정부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 동안 공기업의 총자산은 169조 9,547억 원(180조 8,095억 원에서 350조 7,642억 원) 증가하여 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¹⁸⁾ 22개 공기업의 최근 6년 동안 자산 증가는 차입 확대, 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대부분 조달하였고 영업활동 등 자체 수익을 통하여는 20조 2,097억 원을 조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 비중은 1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림 2> 공기업 규모 증가 추이



추가로 OECD(2009) 자료를 이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고 공공기관의 수는 2위, 공공기관의 고용규모는 가장 큰 국가로 조사되었다.

<표 5> OECD주요국의 공공기관 규모

국가	공공기관 수	공공기관 고용	규모(\$백만)
핀란드	36	98,542	53,486
이탈리아	26	285,282	112,974
한국	301	287,087	173,111
헝가리	317	166,367	7,515
노르웨이	42	29,402	86,250
터키	36	257,165	51,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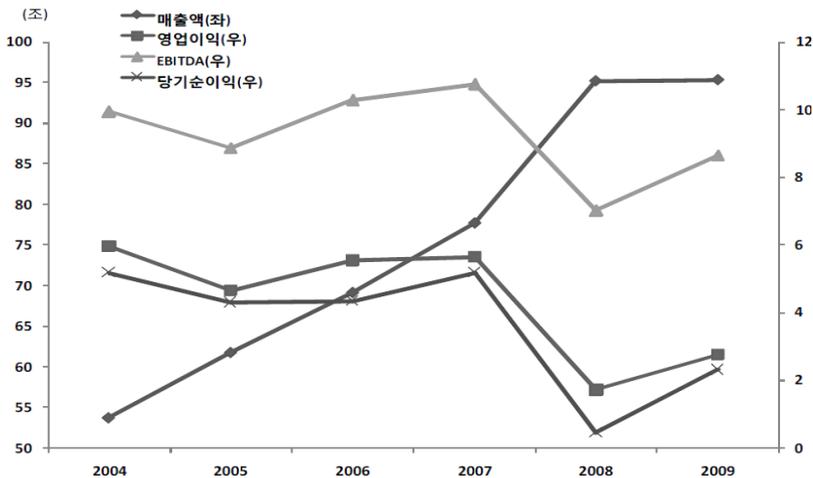
18)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전력공사, 석유공사의 자산 증가액이 116조 4,507억 원으로 전체 자산증가액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은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외국과는 대비되는 현상으로 시장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운용의 비효율성¹⁹⁾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국회예산정책처(2010)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22개 공기업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EBITDA²⁰⁾ 및 당기 순이익은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수익성은 2004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2008년에 급감한 이후 2009년에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개 공기업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공기업은 5개²¹⁾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관이 3개²²⁾에 이르는 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관이 14개에 이르렀다.

<그림 3> 공기업 경영실적



공기업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은 보면 2012년 처음으로 공기업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IFRS)²³⁾에 따라 작성한 결과 전체 공기업 28곳의 총 부채가 327조 7,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공기업 부채(157조 9,907억 원)보다 2.1배 증가한 수치이다(327조 7,380억

19) 인건비측면에서 기획재정부(2008)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02~2007년 기간 중 1인당 부가차치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6.6% 증가하여 2002년 이후 인건비 증가율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높아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감가상각비 효과를 제외한 영업이익.

21) 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마사회, 석유공사.

22) 관광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23) Int'l Financial Reporting Stands.

원).²⁴⁾

<표 6> 부채 규모

(단위: 조원)

년도	부채	부채비율
2007	158.0	106.5
2008	200.8	132.6
2009	238.7	152.8
2010	290.3	168.6(290.8)*
2011	327.7	

주: * '10년, 11년도는 IFRS기준, ()부채비율. 기재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주요 공기업의 부채성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적을 연결하는 IFRS에 따라 결산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2010년 공기업 부채는 당초 290조 8,000억 원에서 328조 4,000억 원으로 37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회사별로는 한전의 경우 2010년 부채가 72조 2,412억 원에서 82조 6639억 원으로 10조 4,226억 원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22조 2,945억 원에서 27조 9,665억 원으로, 석유공사가 15조 8,710억 원에서 20조 8,000억 원, 코레일이 12조 6,236억 원에서 13조 4,562억 원으로, 수자원공사는 8조 853억 원에서 13조 4,562억 원으로 LNH는 121조 5,265억 원에서 130조 5,711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²⁵⁾. 이들 6개의 에너지 및 SOC관련 공기업 6곳의 부채 증가 규모만 35조원으로 27개 전체 공기업 부채 증가액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32%로 민간 기업의 퇴출 기준으로 보는 200%를 훨씬 넘어섰다.

부채의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회계기준 변경 외에 지난 한 해 동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전기료,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기업의 부채급증과 그로 인한 향후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보조금 문제

2010년 G20회의에서 모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왜곡된 보조금 구조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석탄 및 연탄가격보조금으로 전력 교차보조금, 유가보조금, 농어촌 면세유 지급 등도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원

24) '07년 11년 회계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 배수 비교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25)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301%에서 364%로, 석유공사는 123%에서 193%로, 한전은 126%에서 153%로 각각 급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났음에도 부채비율이 461%에서 468%로 오히려 증가했다.

가보상률²⁶⁾ 격차로 인한 종별 간 교차보조 문제, 종별 내 고객 간 교차보조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117, 스웨덴 166, 스위스 176, 슬로바키아는 무려 291에 달할 만큼 국내 전기요금의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객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급원가에 충실한 전기요금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민영화는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복지할인제도²⁷⁾와 같은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4)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효율성

(1) 공공기관 기관장선임제도의 문제점

공기업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정부(정치인)의 기회주의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이며 정치화된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를 들 수 있다. 2011년도 7월부터 9월에 이르는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시기에 나타나는 논공행상의 시장을 분석하면 직·간접으로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이 전직 기관장과 신임 기관장후보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이 정권 초기 5개월 동안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의 집중적인 임명과 그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2009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평가를 받은 96명 중 ‘미흡(D)’ 또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이들은 모두 20명이다. 이 중 12명(60%)이 정치인이거나 대선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기관평가에서 C와 D를 받은 기관 28곳 중에서도 16곳(57.1%)의 기관장들이 정치권 출신이다. 정치권 출신 기관장들의 평균 기관장 평가 점수는 65.2점으로 관료(평균 68.2점)나 기업체(평균 69점) 출신보다 현저히 낮다.

아울러 2008~2010년 3년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흡(D등급) 이하 점수를 받은 기관장과 상임감사 39명 중 20명(51.2%)이 정권창출과정에 연결되어 있다. 특정대학과 그룹(고려대-영남-현대그룹) 등 청와대와 학연·지역·직연으로 연결된 인물까지 추가하여 집계하면 29명(74.4%)에 달한다. 이러한 정권창출과정에 연결된 기관장들은 총선·지방선거 등이 다가오면 임기 중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코레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하고 정치권으로 향한 경우이다.²⁸⁾

26) 2011년 우리나라 전기료의 원가보상률은 87.4%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100원을 들이면 87원에 판매한다는 뜻이다. 한국전력 입장에선 전기를 팔 때마다 13원 가량을 손해 보고 있는 셈이다.

27) 2011년 시행된 주택용 복지할인제도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보자 등이 해당된다.

28) 중앙일보 2012년 2월 22일 보도자료.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기관장 정치경력을 종합·분석하면 정치권/관료출신 및 정권창출과정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기관장, 감사, 이사의 수는 단순계산을 통해서도 기관 당 3명이 넘는다. 이러한 외부인사의 영입시 정부는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에서 민간 출신 기관장을 수혈해 방만한 조직과 방식을 구조조정하고 경영효율화를 이룬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실제로 이 정권 초기 민간 출신 기관장이 다수 선임되면서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내부출신 인사의 기관장, 감사 및 이사 승진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며 외부에서 영입된 이들이 기관장 및 임원급 인사의 포진한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는 매우 제한적이다.²⁹⁾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에 정부투자관리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형성되어 1999년부터 경영평가제도의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장(기관장)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의 도입과 구조조정 지표의 신설, 인센티브 차등지급 확대 등의 조치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원리가 공공기관의 운영원리로 내재화된 반면에 공공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4년부터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87개 정부산하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서 경영평가제도가 양적으로 확산되었다. 인센티브 차등지급 확대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존 방침이 강화되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수익성·상업성 지향이 지속되었다. 200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가 단일한 경영평가제도로 통합되었다. 이후 2009년, 2010년 평가에서 실적을 측정하는 계량지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일원화된 평가지표로 평가하다 보니 평가제도 자체의 결합(성과주의 적용의 문제, 기관고유 목표와의 괴리 문제 등), 조직 외부의 반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주도되는 외형적 구조개혁 압력(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문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인건비 통제 문제 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익성 위주의 평가로 공공성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

5. 향후과제 및 결론

최근 민영화 바람은 인천국제공항, KTX, 전력·가스공사³⁰⁾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항공산업의

29) 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임명했던 관료를 수익지향적인 관리자로 대신한 결과 나타난 생산성 향상이 원인이며 실제로 정부 관리자는 그대로 둔 채 민영화만 단행한 회사의 생산성은 새로운 관리자를 도입한 회사의 생산성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Gruber2011).

30)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는 6차 전력산업수급계획 수립을 통해 2010년 5차 계획보다 확대된 민간자본의 전력

개방화는 이미 세계적 흐름에 있다. 세계 50대 공항 가운데 35개 공항이 지분이나 운영권을 국내·외 민간자본에 개방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서비스분야에서 1위를 하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기엔 다소 부족하다.³¹⁾ 현재 인천공항의 1년 순이익은 3,000억 원 규모이나 부채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인천공항을 아시아 최대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4조원의 개발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정부 지분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고(이 중 15%는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고, 나머지 34%는 해외공항그룹과의 MOU(전략적 제휴)를 맺을 계획)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 지분 확대를 통해 공항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51%는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민간 지분의 확대는 투자자들의 경영 감시 기능으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항공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채와 앞으로의 터미널 확장 등 추가적 투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확대로 인해 민간부문이 위축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KTX의 경우 정부는 2015년 완공되는 수서발 KTX노선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철도 운송사업에 민간기업 참여할 경우 효율성이 높아져 철도요금이 인하됨과 동시에 코레일의 방만한 운영을 고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철도의 공공성 침해와 특혜시비 등의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여러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철도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철도시설투자애 소요되는 자원 마련의 어려움과 경영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철도사업의 공공성보다 기업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서발 KTX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경쟁시키는 것으로 코레일을 공기업 형태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여러 사업자에 철도운송을 맡기면서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도입하여 코레일의 독점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 민영화로 발생하는 요금 인상,³²⁾ 특혜시비³³⁾ 등의 문제를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곤 한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전면적인 민영화도 아닌 일부구간에 우선적으로 경쟁논리의 도입으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시발점이 될

산업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영화된 발전부문은 전체 설비의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만약 6차 계획에 민자발전 건설 영역이 늘어난다면 전체 발전부문 중 민영화된 발전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한전의 100%의 자회사의 발전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를 민영화하고 송전과 배전 및 판매가 통합되어 있는 한전의 사업구조에서 판매사업을 분리하여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의 도입과 인수. 저장부문을 분할하여 민영화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GS그룹의 경우 이미 가스 직도입을 심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31) 여객 이용규모는 2011년 3,347만 명 수준으로 세계 8위, 여객처리능력은 세계 11위에 머무르고 있다.
- 32) 2011년 10월 교통연구원에서 철도운임이 2015년까지는 코레일 대비 15%, 향후 15년간 20% 인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33)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비율의 제한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민간업체의 선정 및 계약에 대해서도 15년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없이 순수운영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 있다.

경제의 기본원리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선택에 따라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은 달라진다.

민영화 정책은 경쟁의 부족, 이윤동기의 부족, 책임의식의 결여 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부문보다 떨어지고³⁴⁾ 공공성을 이유로 공기업 비대화가 궁극적으로 국가재정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어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출발을 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정부 지배하에 두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쟁 압력의 부재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영화의 핵심은 공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바꾸고 공기업을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의 판단은 집행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원칙적인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민영화 실행에 이권이 달린 집단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시장원리의 적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가고 이와 함께 공공성 훼손의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의 민영화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치를 통해 감독을 하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영화 정책의 결과는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 제도적 여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고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영화는 해당산업의 발전단계 및 경쟁구조의 특성,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거래비용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 즉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고려되어야 하는 맥락에서 현재의 경영평가제도에 ‘공공서비스 관련 기관의 품질(역량) 평가’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행해지지 않았던 공공성 평가를 도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관리적 능률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에 공공성 평가요소를 접목시키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순히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파악을 넘어서 공공서비스의 적절성, 지속성, 공공적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정권의 교체 시 ‘전리품’차원으로 전략하는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장, 감사 및 이사의 인사와 민간기업 경영원리에 입각한 수익성·성과만능주의 등의 확산으로 인한 정적적 비능률성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4) Majumdar(1998): 인도 제조산업의 분석을 통해 효율성 순위를 정하여 0에서 1(완벽한 경우)의 크기에서 정부소유의 회사는 0.638~0.658, 소유형태가 복합적인(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0.912정도의 효율을, 그리고 민간 소유의 기업인 경우에는 평균 0.975의 효율성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 참고문헌

- 강현진·이덕로, “공기업의 민영화 평가: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과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20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2.24.(수), 2011.3.3.(목), 2012.1.31.
- 김우호, “영국철도 민영화 정책평가의 교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12.30, 1164권.
- 김현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22집 제1호, 2007, pp.35-60.
- 박기백·박상원, “민영화 지표 연구,” 조세연구원, 2010.12.
- 박정수·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조세연구원, 2011.
- 배준호, “2010년대 공기업 혁신의 기존방향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5권 제1호, 2011.3, pp.1-31.
- 안지영·한중호, “정부의 기업소유지분과 공기업의 비용효율성,”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2011.6, pp.1891-1834.
- 알리오(www.alio.go.kr).
- 예산정책처,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2010.8.
- 조성봉, “이명박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규제연구』 제20권 제2호, 2011.12.
- 한국경제신문, 2012.4.26. 중앙일보, 2012.2.22, 보도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선진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공공기관 선진화 합동학술대회, 2011.5.
- _____, “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정책 토론회, 2009.12.
- Gruber, Jonathan,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Worth. 2010.
- Majumdar, Sumit K., “Assessing Comparative Efficiency of the State-Owned Mixed and Private Sectors in Indian Industry,” *Public Choice*, 96, July 1998, pp.1-24.
- OECD, “Privatization : Recent Trends” *Financial Market Trends*, No. 72, 1999.
- OECD, “Priv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Recent Experiences of OECD Countries,” 2009.
- Saul Estrin,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and Ownership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09, 47:3, pp.699-728.
- William L. Megginson and Jeffrey M. Netter, “A Survey of Empirical Studies on Privatiz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2001, pp.321-389.